칼 럼

장 기 채 주필

생산인구 감소는 강 건너 불 아니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거세다.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한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선지도 오래다.

경제활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저 출산·고령화 문제는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출산율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온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재앙을 코앞에 두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생산과 소비위축, 경제활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추락하고, 보장성 부담은 늘어나는 격랑에 빠지게 된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1.21%의 출산율 때문이다.

또 지난 2019년부터는 총 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니뭐니 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거기다 2015년 우리나라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씩 증가해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집계됐다.

최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녀 84% (복수응답)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집 장만 등 결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속적으로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지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유아기 때무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마음 놓고 연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돈과 집 문제다.

무턱대고 일자리를 늘리기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임대주택과 주택금융, 각종 세목을 접목시켜 평생 아이들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인프라 확충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유출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였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 명 많아지는 것이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해소는 물론이고 교육, 안전, 고용, 보건 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 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도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임금 파크제 도입같은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본은 계속 고용 제도와 임금파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는 성장만을 강조해 왔다.

이제는 인구 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한다.

생산 인구 감소는 강건너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릇된 운전상식 보행자 안전 위협한다

운전자라면 종종 마주치는 광경이 있다.

바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 있고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슬금슬금 보행자를 피해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치는 차량들이다.

교통선진국이라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종종 볼수 있는 아쉬운 모습이다.

최근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평가일까.

어떤 경우는 횡단보도 우선멈춤을 하고 있는 앞선 차량에 대해 빵빵 거리며 경적을 울리며 위협하듯 재촉하는 경우도 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녹색 보행등이 들어와 있어 일단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차량에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우회전하라고 재촉하는 행위나 다름없는데 말이다.

한마디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운전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운전 조급증이나 잘못된 교통법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할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한가지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파란불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는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된 시점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결국 보행자 중심운전문화에 역행하는 결과만 초래한다.

횡단보도 앞에서의 빵빵거림은 소음공해와 운전자 상호간 갈등만 발생하는 만큼 보행자 배려 운전 의식을 기대해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